

# 저출산 대응정책이 출산순위별 출산에 미치는 영향

유 계 숙(경희대학교 교수)

본 연구는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정부의 저출산 대응정책이 출산순위별 출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저출산 대응정책의 영향에 대한 지각과 정책 수혜 경험은 출산순위별 출산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둘째, 저출산 대응정책의 수혜 경험은 출산순위별 출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저출산 대응정책의 수혜 정도는 출산순위별 출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이상의 연구문제를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보건복지가족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2007년 전국 출산동향 조사’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 조사는 2007년 자녀를 출산한 1,729가구(첫째자녀 출산 592가구, 둘째자녀 출산 641가구, 셋째자녀이상 출산 496가구)와 자녀를 출산하지 않은 991가구를 대상으로 이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징, 저출산 대응정책의 영향에 대한 지각, 유형별 저출산 대응정책(보육비·교육비 지원, 자녀에 대한 세제혜택, 보육·교육시설 확충 및 서비스 확대, 일-가정 양립 지원, 모자 건강관리 지원, 불임부부 지원)의 수혜 경험 및 정도를 질문하였다. 조사대상가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징을 살펴보기 위하여  $\chi^2$  검증과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고, 출산순위별 출산에 따른 저출산 대응정책의 영향 지각 및 정책 수혜 경험을 분석하기 위하여  $\chi^2$ 검증을, 그리고 저출산 대응정책의 수혜 경험 및 정도가 출산순위별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일련의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07년의 출산이 저출산 대응정책의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셋째이상 출산가구가 21.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첫 자녀 출산가구가 18.3%, 둘째 출산가구가 15.6%의 순으로 나타남으로써 7.0%에 그친 비출산가구보다 정책의 영향을 지각한 비율이 확연히 높았다. 저출산 대응정책 수혜 경험을 출산순위별로 비교한 결과, 보육비·교육비 지원, 보육·교육시설 확충 및 서비스 확대 정책은 셋째이상 출산가구의 수혜 비율이 가장 높았고, 자녀에 대한 세제혜택 비율은 비출산가구가 가장 높았으며,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 수혜 비율은 첫 자녀 출산가구가 가장 높았다. 한편 모자 건강관리 지원은 둘째 자녀 출산가구와 첫 자녀 출산가구가 유사하게 높은 수혜 비율을 보였고, 불임부부 지원정책은 첫 자녀 출산가구가 가장 높았으나, 수혜 비율은 4.3%로 극히 낮았다. 한편 출산순위별 출산가구 및 비출산가구가 정책의 수혜 정도에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한 결과, 셋째이상 출산가구의 중복수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둘째, 저출산 대응정책의 수혜 경험이 출산순위별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로지스틱 회귀분석한 결과, 모자 건강관리 지원 및 자녀에 대한 세제혜택은 첫 자녀 출산 가능성을 높여주며, 모자 건강관리 지원과 보육비·교육비 지원 및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은 둘째자녀나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할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저출산 대응정책의 중복수혜는 둘째 자녀나 셋째이상 자녀의 출산 가능성을 높이며, 첫 자녀의 출산은 무려 10.5배 높이는 효과를 나타냈다.